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익산시 무암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음 2월 4일) 제20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화이팅” 19일 무주군 안성면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에서 열린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기쁜 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안성면에는 마을가꾸기와 아이 돌봄 등 360개의 일자리가 마련됐으며 20일에는 설천과 무풍, 21일에는 무주, 22일에는 적상, 23일에는 부남면에서 발대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9면>

靑 “대통령 개헌안 오늘 공개”

“22일까지 3일간
오늘 전문·기본권
내일 지방분권
22일 정부형태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관련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관련기사 2면·3면>
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한 뒤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

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비상현안 · 본연업무를 동시에

전북도, 도정운영 투트랙 전략 추진

GM 군산공장 정상화와 함께 주력산업 체질개선 병행
남원 소재 서남대 폐교 관련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내년 국가예산 확보 · 새천년 도약 핵심프로젝트 점검

전북도가 최근 GM, 조선소, 서남대 등 외부적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도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 도정운영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투트랙 전략은 GM, 조선소 및 서남대와 같은 ‘비상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예산 확보, 새천년 도약 핵심프로젝트 등 ‘본연업무’도 소홀하지 않도록 집중도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비상현안에 대해서는 ‘GM 군산공장 정상화’와 함께,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미래를 준비하는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M 군산공장 정상화’와 관련, 정부 부지사가 주재하는 ‘정상화 대책회의’를 매일 운영하여 주요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또한,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북산업구조 개편방안 용역’과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3.20 예정) 등을 통해 전북경제 체질개선 및 지역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서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해 나간다.
설립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의와 함께 남원의료원의 기능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비상현안 대응과 함께, 국가 예산 확보, 새천년 도약 핵심프로젝트 등 본연업무들도 양 부지사를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의 부처실링 배정(3월말) 전에 부처를 방문하여 설명 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군산 등 산업구조 체질개선 발굴사업의 추경 반영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지사가 국회 수석전문위원 방문 및 지역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 활동을 펼쳐 나간다.
새천년 도약 핵심프로젝트도 53개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가며 천년 기념사업 또한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현안법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민연금공단과 공조하여 교육 예산 확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도 국회 법사위소속의원을 방문하여 설명 ▲잡버리지원 특별법 제정도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조속히 협의를 마쳐 나갈 계획이다.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회식 대행사 선정(4월), 경기장시설 승인(6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3.27), 전라북도 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비상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함은 물론,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본연업무에 대해서도 성과를 높여나가 도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구속 불가피한 중대 범죄,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범죄 혐의다. 그런 혐의들이 겹쳐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뭉치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런 사안은 구속수사해왔다”며 “우리 형사 사법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묻는 걸 원칙으로 해왔단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수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위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반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삼민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